

주요 내용

■ 총선 후 임금·단체협상 전망과 시사점 ■

□ 2000년 임·단협의 주요 환경

- (임금 인상 투쟁과 총파업) 노사간의 임금 인상안이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총파업과의 연계 방침 등 노동계의 자세가 매우 강경함
- (노동계의 정치 활동) 노동계의 독자적 원내 진출 실패로 임금 인상 등 개별 기업 현안에의 집중 가능성이 확대되고, 제도 개선 문제도 병존되어 있음
- (노·사·정의 역학구도) 민주노총의 경우 독자적인 정치 참여의 무산으로 과거와 같이 조직력과 투쟁을 배경으로 한 의견 관철 방식을 고수하게 됨
- (노사정 합의 기구의 역할)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 및 위상 정립 여부가 불투명하며 쟁점 논의 및 합의사항 이행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질 것임
- (정책 방향 및 정부 개입) 정책 방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,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 확대와 각종 선거 공약의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됨

□ 전망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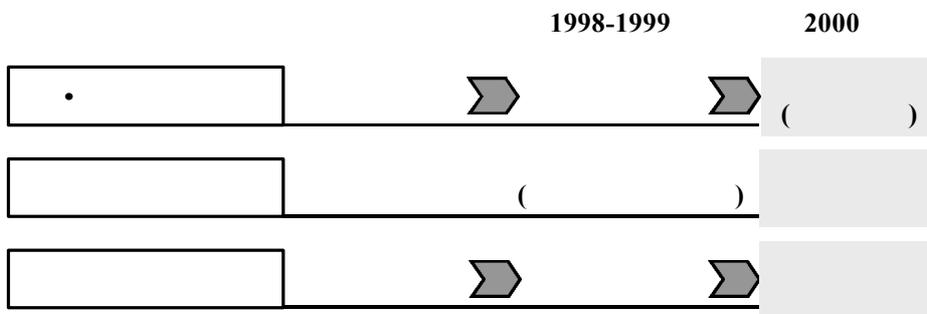
- (전망) 개별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위주로 한 갈등과 더불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입장이 대립될 것으로 판단
- 노동계의 구조조정 관련 반발과 정치적 주장 확대, 이에 대한 기업의 확고한 입장과 정부의 강경 기조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정성도 높아질 우려가 큼
- (시사점) 임금 협상에 있어서 합리적인 수준의 전체적인 임금 상승, 성과 중시형 보상 체계 임금유연성 증대 등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

총선 후 임금·단체협상 전망과 시사점

2000년 임·단협의 의미 및 특징

- (핵심 쟁점의 이동) 외환위기 이후로 고용 안정을 위한 양보교섭 국면을 보이던 것이 올해 들어서에는 임금 인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
 - (외환위기~1999년 : 고용 투쟁) 급격한 경기 침체와 인력 감축을 주축으로 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인해 임금 인상보다 고용 안정이 더욱 중요했음
 - (2000년 : 임금 투쟁) 경기 회복 및 안정 성장의 진행, 기업 실적 호전에 따른 소득 보상 욕구 증대 등으로 임금 인상을 최대 현안으로 강조하고 있음
- (노동계 정치 활동과의 연계) 노조의 정치 참여가 거의 완전히 보장된 이후 처음 실시된 총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임·단협 교섭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됨
 - 즉 노동계는 정계 진출을 위한 적극적 정치 참여와 더불어 총선 시기를 전후하여 총선 투쟁, 총파업 및 임·단협 교섭 일정과 지침을 마련함
- (노사관계 국면의 일대 전환점) 올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느냐 과거 행태로 회귀하느냐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
 - 최근 들어 경제위기 이전의 임·단협 양상이 상당부분 다시 나타남으로써 이전의 대립적 노사관계 행태가 다시 등장할 우려가 높은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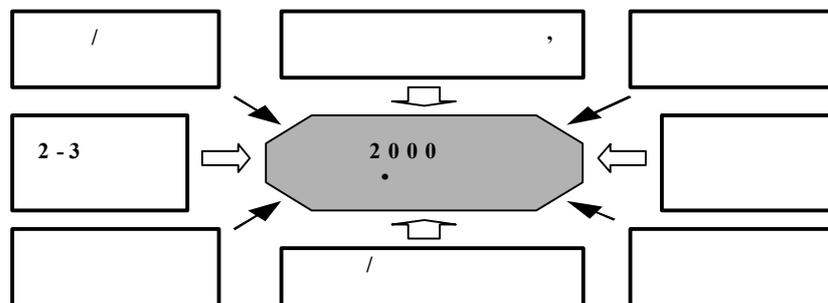
< 중기 Trend 하에서 올해 임·단협이 갖는 의미 >



올해 임·단협을 둘러싼 주요 환경

- (임금 인상 투쟁과 총파업) 노사간의 임금 인상안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총파업과의 연계 방침 등 노동계의 자세가 매우 강경한 상황임
 - 경기 회복세 지속, 기업 경영 실적 호전, 소득 보상 욕구 등을 근거로 노동계는 작년보다 훨씬 높은 13~15%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(경총 5.4%)
 - 한편 노동계는 5월 말 총파업을 계획한 가운데 올해 노동절을 ‘투쟁하는 노동절’로 설정하는 등 임·단협 집중 교섭과 연계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
- (노동계의 정치 활동 및 정치적 쟁점) 노동계의 독자적인 원내 진출 실패로 제도 개선 및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은 작아짐
 - 반면, 이로 인해 노동계의 임·단협 전략은 개별 기업의 임금 인상 등 현안을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음
 - 한편 금융권 2차 구조조정(한국노총 위주), 대우자동차 해외매각(민주노총 위주) 등 정치적 쟁점들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,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문제도 임·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가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
- (노·사·정의 역학구도) 총선을 통해 노동계 출신 의원이 다소 늘어났을 뿐, 양대 노총의 정치적인 행동 양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 - (한국노총) 제도권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가 다소 확대됨으로써 정치권 압력단체로서의 면모는 다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나, 큰 변화는 없을 것임
 - (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) 독자적인 정치 참여가 무산됨으로써 과거와 같이 조직력과 투쟁을 배경으로 한 의견 제안 및 관철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게 됨

< 올해 임·단협과 관련한 제반 환경 요인들 >



- (노사정 합의 기구의 역할)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 및 위상 정립 여부도 올해 임·단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
 -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에 부정적이고 원내 진출 실패로 참여 유인도 작아져 노사정위의 복원이 불투명하고 완충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
 - 한편 정부는 정치적 쟁점들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자 할 것이며, 이는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를 표면화시키게 될 것임
- (정책 방향 및 정부 개입 행태) 여당의 낮은 득표율로 노동 정책의 방향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, 향후 대선을 감안하여 개별 기업 노사관계에 정부 개입의 여지를 높일 것임
 - 또한 총선을 앞두고 제시된 각종 대책들의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, 이는 나아가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
 - 더욱이 경제 회복기라는 여건 하에서 노동계는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큼

향후 전망 및 시사점

- (전망) 개별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위주로 한 갈등과 더불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입장이 대립될 것으로 판단됨
 - 또한 노동계가 구조조정을 둘러싼 반발과 정치적 주장을 확대해 가는 한편 정부는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어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정성도 높아질 우려가 큼
 - 한편 경기 호전, 인력 부족, 물가인상률 상승으로 근로자 전반의 소득 보상 심리는 매우 높은 반면 기업별로는 지불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 심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
 - (시사점) 기업별 임·단협 협상의 갈등 고조, 파업 국면의 확대로 인해 노사관계 악화, 고비용-저효율 구조의 재연, 구조조정 부진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·사·정의 대응 마련과 타협 모색이 절실히 요구됨
 - 임금의 경우 교섭임금 이외에 정기 호봉 인상, 초과급여 증가까지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로 접근되어야 할 것임
 - 더불어 성과 중시 임금 체계의 확산 추세 지속 및 임금 유연성의 증대 경향도 반영 필요
- (민주홍 연구위원 jlmin@hri.co.kr ☎ 3669-4015)